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2018년 10월 11일



| 금주의 이슈 |

- I.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 3
-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 11
- III.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 23

금주의 이슈

2018. October 제 19 호

금주(10월 둘째 주)는 경제, 안보, 복지 분야에 관한 3편의 이슈를 다루었음. 제1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남북정상이 도출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안하였음. 이어 제3편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음

○ 제1편 \ 총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8월 실업률이 4.0%로 IMF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청년·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함으로써, 文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근로자·서민·청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음. 최근에는 고용률 뿐 아니라 30~40대 취업자수까지 대폭 감소함으로써 고용참사를 넘어 고용재난 사태에 이름. 국민들 역시 文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고,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제2편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 이윤식 연구위원

9.19(水) 남북 정상은 2차례 회담을 통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 그러나 문제는 <평양선언>의 경우 핵신고 없이 자발적 무장 해제만을 합의했다는 평가가 높고, <군사합의서>의 경우 우리 스스로 △육해공 3軍 무장해제, △수도권 주민의 안전포기, △NLL 무력화, △한미연합 전력 훼손 등을 시도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사수해 온 NLL을 북측에 유리하게 설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증폭. 이에 우리는 향후 同 합의서의 시행으로 인한 남남갈등 격화 가능성,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등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

○ 제3편 \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 장경수 선임연구위원

文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 일자리 확보 차원의 일자리정책이 아닌 진정한 복지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정책간의 분절성 오류, 복지 민간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 단절 등의 우려를 지적할 필요가 있음

I .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02-6288-0531

8월 실업률이 4.0%로 IMF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청년·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함으로써, 文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임금근로자·서민·청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음. 최근에는 고용률 뿐 아니라 30~40대 취업자수까지 대폭 감소함으로써 고용참사를 넘어 고용재난 사태에 이름. 국민들 역시 文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을 시급히 폐기하고,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제고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함.

1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 ◆ 일자리정책은 文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
 - ▶ 文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 발표(7.19)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발표(10.18)時 일자리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강조
 -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기 5년간 약 2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¹⁾
 - 완전고용에 가까운 장밋빛 목표 제시
 - ▶ 그 중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등 정부 주도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이 단연 압권²⁾
 - 공공부문 고용을 3%p 높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10.6%)에 맞추면 2,700만명의 3%인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봄

1) 서울경제신문(10.7) “발표만 413만개...넘치는 일자리 공수표
 2) 공무원 일자리 국가직 10만명, 지방직 7.4만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보육·요양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명 등 81만명

◆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추진에 총 54조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

- ▶ 지난해 18조 3861억원, 올해는 이보다 32.1% 증액한 24조 1958억원 등 총 42.58조원의 예산을 배정³⁾
- ▶ 2018년 末까지 일자리 관련 재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54조원으로 알려져 있음⁴⁾
 - 지난해와 올해의 본예산 36조원에 2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4조 8000억원 및 올해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합한 금액임

<표 1> 2017·2018년 일자리 예산 규모

본예산	2017년	17.7조 원
	2018년	19.2조 원
청년일자리 추경 예산		14.8조 원
일자리 안정자금		3.0조 원
합계		54.0조 원

2 文정부의 일자리 성적표

◆ ‘IMF이래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

- ▶ 54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은 全無하고 세금과 관치가 만든 일자리만 일부 증가했을 뿐 기존의 수많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소실됨

<표 2> 주요 고용지표(2018년 8월)

지표 명		증감	의의
고용률		60.9%	- 전년동기대비 0.3%p하락 - 최근 3년3개월내 최대 낙폭
취업자수	전체	3천명 증가	- 2010년 1월 이후 최저
	40대	15.8만명 감소	- 1991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
실업률	실업률	4.0%	-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 - 2000년(4.1%) 이후 최고치
	체감실업률	11.8%	-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청년실업률	10.0%	- 전년동기대비 0.6%p 증가
	청년체감실업률	23.0%	-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		113.3만명	- 전년동기대비 13만4천명 증가 - 1999년 이후 최대 8개월 연속 백만명 상회

* 자료: 통계청 외 관련지표

3)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2018.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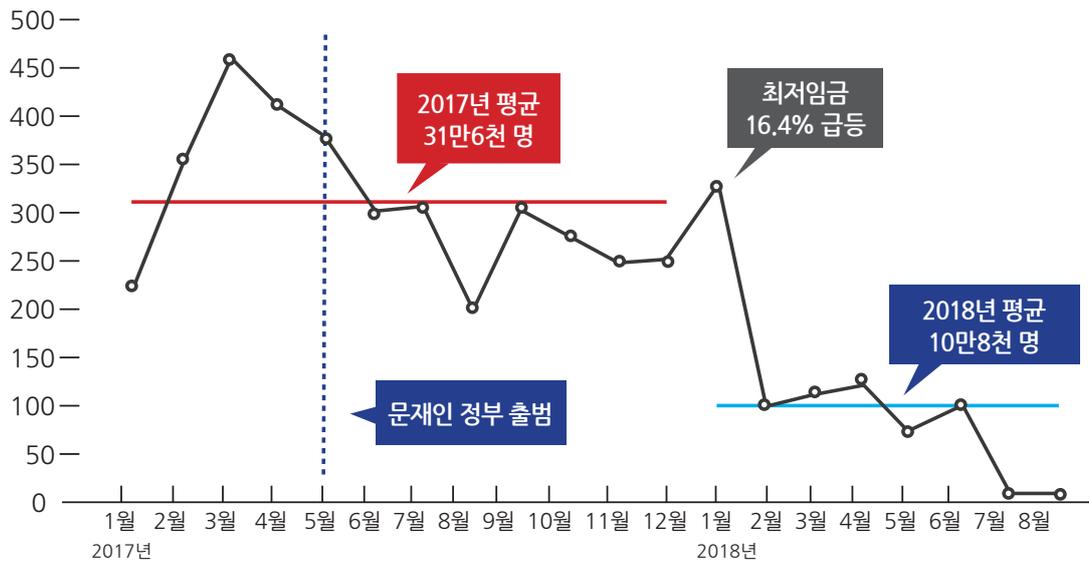
4) 54조원과 42.58조원과의 차이는, 세부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자료누락, 미취합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1 취업자 수

◆ 惡化一路의 취업자 지표

- ▶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9.12)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는 2,690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천명 증가에 거쳐,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 기록
 - 지난 7월 고용동향 통계발표 시 5천명 증가에 그쳐 ‘고용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지만, 8월에는 더욱 악화된 상황
- ▶ <그림1>에서 보듯이 월별 고용증가폭이 금년 1월까지만 해도 20만명~40만명(평균 31.6만명) 수준이었으나,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文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2월 이후 8개월째 10만명帶 혹은 그 이하로 추락
 - 7월과 8월에는 연속적인 고용증가 제로수준의 ‘고용재난사태’를 보임

<그림 1> 월별(2017.1~2018.8)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40대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

▶ 올해 1~8월 중 30~40대 평균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5.2만명 감소한 1,227.1만명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

· 2001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 유지(2015년 8만명 감소, 2016년 10만명 감소, 2017년 8.3만명 감소 등)

◆ 10.12(금)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동향 통계도 7월, 8월 대비 비관적 전망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폭이 비교적 양호(31.4만명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금년도 9월 취업자증가폭이 이에 미치지 어려우며, 금년도 9월 중 제조업 중심의 고용부진 지속 등으로 10만명 내외 감소 전망도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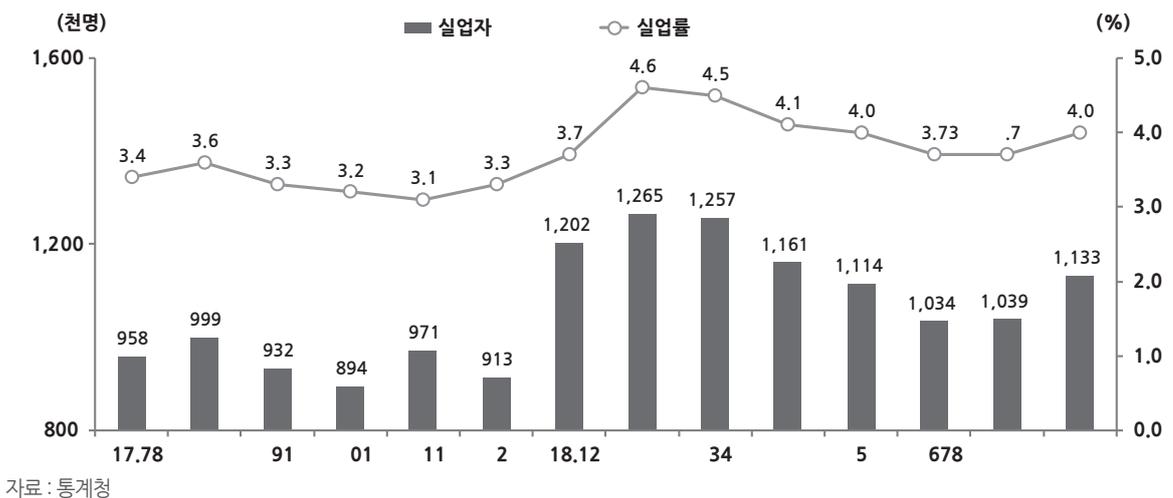
2 실업률·실업자수·고용률

◆ 일자리 재난 장기화로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고용 상황 수준에 이름

▶ 8월 전체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4%p 상승한 4.0%로, 지난 2000년(4.1%)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

▶ 8월 전체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4만명이 증가한 113.3만명으로, 1999년 8월(136.4만명) 이후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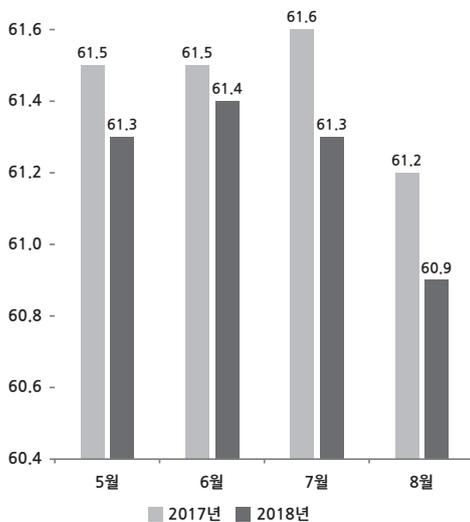
〈그림 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2017.7~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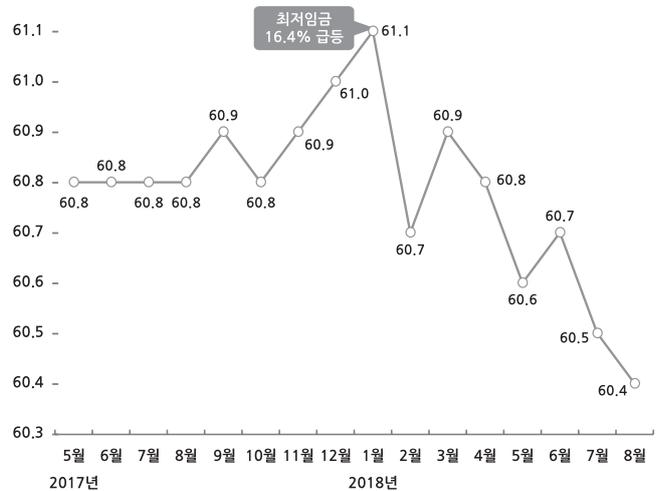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2018.10.7.). 반명 동 기간동안 60세 이상 취업자는 월평균 23.2만명 증가

- ◆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이후 특히 청년·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
 - ▶ 8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1999년(10.7%) 이후 최고치
 - 이들의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무려 23.0%로 악화
 - ▶ 매년 감소하는 OECD회원국 전체의 청년실업률에 비해 한국만 逆주행
- ◆ 고용률 역시 2016년 5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
 - ▶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는 대통령 발언(8.25)은 일부 유리한 통계만을 내세워 객관적 시장현황을 무시한 처사
 - 최저임금이 급등한 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7~8월은 하락 폭이 0.3%p로 연초보다도 확대됨
 - 계절조정된 고용률의 경우 8월이 60.4%로 2016년 5월(60.3) 이후 최저치

〈그림 3〉 고용률 추이(전년동월대비 및 계절조정 계열 기준)



단위: 원계열 기준, %



단위: 계절조정 계열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평가

- ◆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文정부의 이른바 세금주도 일자리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 ▶ 출범 17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의 효과가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재난사태'로 나타남

- ◆ 그럼에도, 文정부와 집권 여당은 非현실적 변명으로 일관
 - ▶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탓(통계청),⁶⁾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에 불과"(청와대),⁷⁾ "일자리 참사 등의 책임이 前정권에 있다"(김영선 여당 의원)⁸⁾

1]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실패한 일자리창출

- ◆ 54조원의 일자리 예산 편성 및 42.6조원의 재정 투입에도 수십만명의 민간 일자리 감소 초래
 -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3.4조원, 민간 일자리 창출에 9.8조원 등 13.2조원의 직접 일자리 예산 집행
 - ▶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객관적 효과 없이 낭비된 결과
 - 2,200만원 연봉의 일자리 245만개 예산이 사라졌거나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높은 실정⁹⁾
- ◆ 文정부식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음을 再확인
 - ▶ 文정부의 세금주도 일자리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일자리 파괴의 고통을 일시적·임시적으로나마 줄여보려는 예산에 불과
 - 最多 예산(22.8조원)이 투입된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시급한 일자리 창출과는 상당한 괴리
 - 다음으로 많이 쓰인 '민간일자리 창출(9.7조원)' 예산 역시 나타난 효과가 전무
 -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일자리의 신규창출로 보기도 어려우며, 막대한 확대재정 수반으로 국가·국민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귀결
 - 새로이 창출하겠다는 81만개 중 실질적 창출은 17.4만개 공무원 일자리뿐임. 나머지 64만개는 정부·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형태 민간부문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은 아님
 -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 1인당 연간 1억원 내외가 소요되며, 따라서 17.4만명 고용에 소요되는 예산은 30년 근속 평균으로 연간 17조원 소요 예정. 더불어, 이들에게 지출되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이 92.4조원에 이룸¹⁰⁾

6)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10.1).

7)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9.12)

8)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9.13) 등

9)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1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다"며 과거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함. 동일한 논리라면,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같은 연봉의 일자리 245만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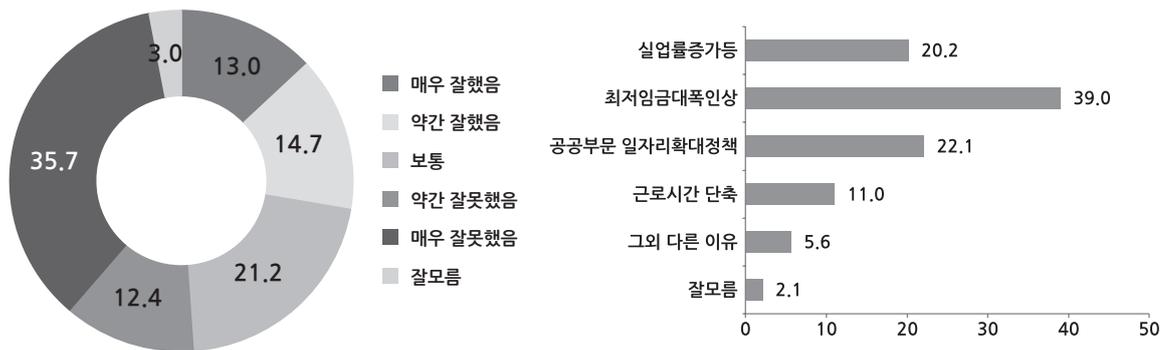
10) 예산정책처 자료. 17.4만명 중 65세 이상 연금 수령자 17.1만명 대상 사망 전까지 지급될 총 연금액수를 추산

2 文정부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¹¹⁾

◆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결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

- ▶ 부정적 인식 비율이 48.1%(매우잘못 35.7%, 약간잘못 12.4%)로 긍정적 비율(27.7%)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 일자리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지적
 - 예문으로 제시한 5가지 이유 중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39.0%)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서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확대 정책(22.1%), (청년)실업률증가(20.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일자리정책 평가 및 일자리정책이 잘못된 이유



◆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 ▶ 향후 고용상황에 관해서는 ‘나빠질 것(48.4%)’으로 보는 응답자가 ‘좋아질 것(26.1%)’이라는 응답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

11) (재)여의도연구원에서 8월 22~2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임

4 시사점

- ◆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主役이 될 수 없음을 再확인
 - ▶ 공무원증원과 같은 정부주도 일자리정책의 폐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리스는 근로자 4명중 1명이 공무원일 정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오다가 2010년에 국가 부도사태 초래
 - 좌파 포퓰리즘 정부 12년간 공무원을 2배 가까이 증원하여 근로자 5명 중 1명이 공무원인 아르헨티나 역시 최근 IMF 구제금융을 신청
 - ▶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촉진자(catalyst)이자 지원자(supporter)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 ◆ 국가경제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자율과 공정의 시장경쟁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함
 - ▶ 형식적 일자리 정책과 대중 인기영합주의적 세금주도 일자리창출 전략은 일자리 소실과 국민의 절망으로 이어지게 됨
 - 특히, 우리경제의 중추이자 고임금·정규직 위주인 30-40대 취업자수의 지속적 감소와 서민·청년층의 취업률 급감은 당사자·가족의 경제력 상실뿐 아니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
 - ▶ 지난 대선時 우리 黨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창출’이었으며, 기업을 통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노동개혁을 통한 근로자 보호 및 기업경쟁력 강화로 요약됨
 - 출범 17개월이 경과한 文정부는 이러한 보수 정당의 시장 중시의 일자리 정책 기조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등 정책의 방향을 시급히 전환할 필요
 - ▶ 규제혁파, 노동시장 유연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과감한 혁신이 필수
 - 집권 文정부는 경제를 특정 이념과 철학으로만 이해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경제체제 아래 규제혁파와 제도혁신을 경주해야 함
- ◆ 正道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불가피함
 - ▶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8개월 연속 100만 이상의 실업자를 양산한 文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 무엇보다 청년층과 임시·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 종사자 등 빈곤층 일자리의 대폭적 상실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 없이는 국가경제·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천만한 경제실험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음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작성: 이윤식 연구위원 ☎02-6288-0548

9.19(水) 남북 정상은 2차례 회담을 통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 그러나 문제는 <평양선언>의 경우 핵신고 없이 자발적 무장 해제만을 합의했다는 평가가 높고, <군사합의서>의 경우 우리 스스로 △육해공 3軍 무장해제, △수도권 주민의 안전포기, △NLL 무력화, △한미연합 전력 훼손 등을 시도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사수해 온 NLL을 북측에 유리하게 설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증폭. 이에 우리는 향후 同 합의서의 시행으로 인한 남남갈등 격화 가능성,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등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1 개요

- ◆ 9.19(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 회담을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
 - ▶ <평양공동선언>은 ①적대관계 종식, ②경제협력의 증대, ③이산가족문제 해결, ④사회문화교류 활성화, ⑤한반도 비핵화 진전, ⑥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訪南 등으로 구성
 - ▶ <군사분야 합의서>는 ①全軍 적대행위 중지, ②DMZ 내 GP철수 및 JSA 비무장화, ③서해평화 수역 조성, ④한강하구의 공동이용, ⑤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등으로 구성
- ◆ 물론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했던 얘기의 반복에 불과
 - ▶ 그보다는 합의문이 △비핵화 로드맵 도출 실패, △종전선언을 우회한 무장해제, △한미 동맹간 군사신뢰관계 훼손, △대북제재 공조의 파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
 - ▶ 특히, <군사합의서>의 경우 우리 스스로 △全軍 무장해제, △수도권 안보포기, △NLL 무력화 등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적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

◆ 이에 同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합의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핵심 쟁점 및 향후 파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북핵폐기 없는 안보주권 해체가 가져올 위험성을 조명하고자 함

2 핵심 논란

■ 평양공동선언: 핵신고 없이 자발적 무장해제만 합의

① 비핵화 조치: 핵리스트 대신 조건부 영변 핵동결로 현혹

- ▶ 5조: 핵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엔진시험장의 영구 폐쇄(1항)와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2항) 등에 전격 합의
- ▶ 그러나 북한은 이미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해 이동식발사대(TEL)를 사용하고 있어,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는 어차피 불필요한 시설로 용도 폐기의 대상
 - ※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국방력 증강 보고서’(2017)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ICBM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발사대를 최대 200대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 또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조건부 조치로, 향후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
 - 체제안전보장은 ‘종전선언’을 넘어 美 전략자산 미전개, 핵우산 철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핵폐기 거부를 위한 구실로 활용
- ▶ 무엇보다 영변 핵시설은 1994년 제네바합의 때 이미 동결을 약속했고, 또한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후 냉각탑까지 폭파(2007)했던 시설인데,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는 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의미

② 군사적 조치: 종전선언을 우회한 사실상의 군사적 무장해제

- ▶ 1조: 군사 적대관계의 종식과 한반도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채택(1항)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2항)하는데 합의
- ▶ 1항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종전선언의 조기 실현이 힘든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위험의 해소라는 명분 하에 사실상 무장해제에 나선 것으로 보임
- ▶ 육해공 全軍의 적대행위 중지와 DMZ 내 GP철수 및 JSA 비무장화, 그리고 서해평화수역 조성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사항은 심각한 전력 약화를 넘어 우리의 국가안보를 완전 포기한 것임
 - ※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핵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리의 ‘조기 경보’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도 영향을 줘 궁극적 한미동맹간 군사적 신뢰관계의 훼손을 야기
 - ※ 특히, 서해안충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NLL이 아닌 북한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해 스스로 NLL을 무력화했으며, 애초 남북 GP 숫자(60 vs. 160)가 다른 상황에서 同數 철수도 큰 문제

③ 경제적 조치: 제재를 위반한 경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성

- ▶ 2조: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차원의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1항)과 조건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2항) 등의 협력에 합의
- ▶ 同 합의는 ‘비핵화 진전없이 대북제재 해제없다’란 원칙 하 남북한 경제협력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미국의 방침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 가능성이 있음
- ▶ 이와 함께, 철도도로연결은 최소 수십 조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민 혈세의 낭비가 커서, 향후 심각한 남남갈등의 우려가 있음
 - ※ 통일부(2008)는 철도 개보수에 8조 6000억 소요를 예상했고, △씨티그룹(2018) 70조, △미래에셋(2018) 112조, △금융위원회(2014) 153조 등 수십 조 원의 비용 소요

■ 군사분야 합의서: 육해공 적대행위 중단의 眞意

① 피로 지켜온 NLL의 무력화

- ◆ 해상 적대행위 중단 수역의 범위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정
 - ▶ 남북회담 직후(9.19)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북 각각 40km씩 총 80km라고 설명해 마치 동등하게 합의된 것처럼 발표

합의 발표 직후 배포한 지도



주:매일경제(2018. 9. 21) 참조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평적 평가 및 전망

- ▶ 그러나 <군사분야 합의서> 1조 2항에 ‘남측은 덕적도, 북측은 초도 수역’으로 명시돼 실제로는 85km vs. 50km로 우리가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촉발

실수 인정 후 55km 추가된 지도



주:매일경제(2018. 9. 21) 참조

- ▶ 특히, 완충수역 설정이 우리측 NLL 기준이 아닌, 북한의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조직적 NLL 무력화 시도가 강하게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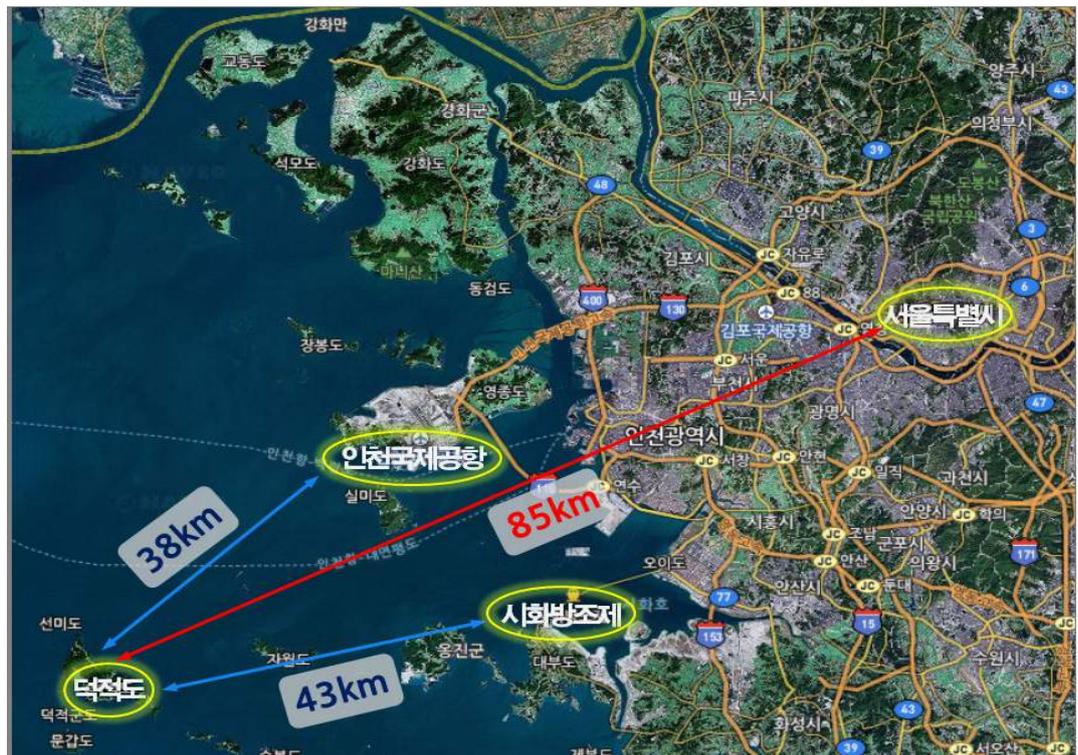


주:세계일보(2018. 9. 21) 참조

- ◆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의 장사정포 및 대함미사일 등 우리를 위협하는 핵심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있어 해상 완충 수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본질
 - ▶ NLL과 수도권의 서측방을 지키는 우리 해병대의 합동작전체계는 뿌리 채 흔들리는 반면, 강령반도와 옹진반도 그리고 장산곶 등에 위치한 북한 4군단의 방사포 및 대함미사일(실크웍 등)은 무관
 - ▶ 특히, 합의서 채택 당일에도 북한은 300mm 방사포(사거리 200km)를 개성공단 북측에 추가 배치한 것이 확인돼 우리만 열심히 무장해제 중이란 것이 증명
 - ※ 9.20(木) 국방부는 “6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에 현재까지 그 지역에 약 50여문의 방사포가 배치 중인 것으로 추정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평적 평가 및 전망

- ◆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우리 장병이 목숨으로 지켜온 NLL 무력화는 물론 서해 5도의 고립으로 이어져 북한의 기습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 ▶ 2차 연평해전(2002)이나 연평도포격(2010) 때처럼 북한이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서해 5도 주민 약 1만명이 위협에 그대로 노출
 - ▶ 또한, 한강하구를 개방(4조 4항)하고 시화호와 인접한 덕적도까지 오픈해 북한 경비선과 공동 순찰을 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을 전면 포기하는 것임



주: 자체제작

② 압도적 힘의 우위인 공군력 포기 및 DMZ 내 수도권 상실

- ◆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우리軍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포기를 의미
 - ▶ MDL에서 20~40km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면, 수도권을 목표로 전방 전개한 북한軍 주력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 근접 정밀 타격도 불가능
 - ▶ 북한이 장사정포로 도발을 해올 경우 대응사격을 위한 표적 정보는 MDL 남쪽 20km 이내에서 운용되는 무인기가 가장 효과적인데, 이에 대한 운용이不可
 - ※ 현재 전방 군단에서 활용 중인 금강 정찰기 및 무인정찰기(UAV) 등의 운용이 중단되면, 對北 감시 역량에 사각지대가 생겨 우리軍의 신속한 대응력에 차질이 발생



주:동아일보(2018. 9. 21) 참조

II. 평양선언과 군사협약의 비평적 평가 및 전망

- ▶ 또한, 우리의 對北 군사적 절대 우위인 ‘근접 정밀타격 전력’에도 차질이 불가피
 - 사거리 20km 이내 전방 지역 북한軍 중요 군사표적(장사정포 갱도, 지휘소, 탄약저장소 등)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해선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대형 폭탄 사용이 필수
- ◆ 한편, 남북 각각 5km 지역 내 훈련 중단은 전력 공백의 방치를 의미
 - ▶ 한국은 휴전선 아래쪽이 대부분 民家라서 기동 훈련 및 포사격 훈련을 실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몇 년이 지나면 훈련하지 않는 불필요한 軍隊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배적
 - 한미연합 훈련과 자체 기동 훈련이 중단되면, 전방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장병들의 능력도 半減될 수밖에 없음
 - ▶ 또한, GP 철수시 산술적 同數 폐쇄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면 남북간 GP 규모(60개 vs. 160개) 차이로 향후 우리軍의 DMZ 내 주도권 상실이 명약관화

〈표 1〉 남북한 GP 내 주요 현황

구분	한국	북한
규모	60여개	160여개
병력	1,800명	1만명 이상 추정
보유 장비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박격포, 14.5mm 고사총, 무반동포 등

③ 한미연합 방위력의 현격한 약화 가능성

- ◆ 同 합의서가 실행된다면, 한미연합 훈련 및 작전계획 등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 ▶ 한국군의 자체 훈련 중단으로 인한 작전수행력 저하와 한미연합작전 경험 부족 등이 합쳐질 경우 戰時 정상적 연합작전 수행력에 곤란이 초래
 - ▶ 더욱이 육해공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로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차단되면, 한미 군사 동맹의 신뢰관계 훼손은 불가피한 수순
 - 특히, JSA의 비무장화와 GP 철수 등 DMZ를 평화지대화 한다는 개념은 결국 유엔사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궁극적 한미동맹 와해를 초래

3 종합 평가

■ 美 의회 및 전직 관리의 평가

- ◆ 에드워드 마키(민주당 상원의원): “김정은은 ‘기만과 시간끌기’에 전념 中”
 - ▶ 이번 선언이 북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또다시 ‘시간끌기’에 돌입
 - ▶ 특히,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핵물질 생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동 중인 북한이 요구할 사항은 아님

- ◆ 크리스토퍼 힐(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6자회담 수석대표): “셀프 검증’ 아닌 국제절차 준수가 필요”
 - ▶ 평양선언에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미국이 원하는 핵시설 신고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닌 스스로의 ‘셀프 선택’에 불과
 - ▶ 즉, 북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조치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제대로 된 ‘동결→신고 및 불능화→검증/사찰→폐기’가 필요
- ◆ 게리 세리모어(前 백악관 NSC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영변 핵동결은 현 시점에서 무의미”
 - ▶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미 수차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받는 건 무의미
 - ▶ 특히,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의 경우 직접 참관하지 않아도 위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관이 불필요 하지만, 추후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
- ◆ 브래들리 맵슨(前 세계은행 고문): “평양선언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 가능성이 더욱 커짐”
 - ▶ 이번에 합의된 경험 사업들은 미국의 북핵 폐기를 위한 제재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들로, 향후 한미간 대북 공조는 물론 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개연성 다분
 -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은 안보리 제재와 美 독자제재가 걸려 있으므로 미국이 결코 정치적으로 달가워할 사안이 아님

■ 美 언론의 반응 및 평가

- ◆ 워싱턴포스트(WP): “북핵 폐기라는 디테일이 생략된 합의”
 - ▶ “선언문에서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없었으며 문재인·김정은은 북핵 폐기에 대한 디테일을 거의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
 - ▶ “또한, 평양선언에서 약속한 北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영구폐기는 이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후 해체하기로 약속한 사안으로 기존의 반복에 불과”
- ◆ 뉴욕타임즈(NYT): “영변 핵동결로 제재 완화를 얻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속내”
 - ▶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만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켜 궁극적으로 제재 완화를 얻어내고 나아가 핵보유국이 되려는 속셈”
 - ▶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재 북한은 영변 이외에 각종의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

◆ AP통신: “핵리스트 신고 및 비핵화 시간표가 빠진 미진한 합의”

- ▶ “기대할만한 몇몇 조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핵 리스트 제출, △비핵화 시간표 등 워싱턴이 바라는 주요 조치까지 미치지 못한 선언”
- ▶ “김정은이 언급한 ‘핵무기, 핵위협 없는 한반도’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주한미군 철수까지를 포함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미/대남 전략전술의 일환”

◆ 블룸버그 통신: “정작 중요한 이동식 발사대와 HEU 부분은 제외”

- ▶ “이번 선언에서는 정작 중요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와 은폐가 매우 용이한 전국에 산재된 고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음”
- ▶ “유관국 핵 사찰에 대해선 동창리만 언급하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 부분은 조건부를 달고 있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

■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종합 평가

◆ 군비통제의 기본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逆行

- ▶ 군비통제의 기본은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정찰은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임
※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 1992年):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34개국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체결
- ▶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전방지역 감시 불가로 북한의 기습 허용 또는 역으로 과도한 대응을 초래해 군사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증대

◆ 수도권 안전과 북한의 기습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 ▶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을 방어하는 김포반도 내 우리 부대는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기본적인 감시 및 대응 자체가 제한되어 서울과 수도권의 안전이 위협
· 한강하구 및 MDL에서 서울까지 약 50km 내외에 불과하며, 덕적도에서 서울까지 85km, 영종도까지 38km, 시화호까지 43km에 불과해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항시 상존
- ▶ 이외에도 전방지역 각각 5km 이내에서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 훈련 금지와 서부전선 20km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수도권의 지상 방어도 크게 제한
- ▶ 또한, 북한군이 철원지역 공동유해 발굴 사업지역이나 한강하구 공동이용 지역에서 기습적 도하를 감행한다면 서울이 一擧에 포위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핵위협 제거 없는 군사분야 합의로 안보위기 초래가 예상

- ▶ 북핵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을 내어준 이번 <군사합의>는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놓고 도박을 한 것과 다름없음
 - 비핵화의 ABC인 신고·사찰·검증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음에도 남북경협 속도만 높여 한미간 갈등 요소가 더욱 커지게 됨
- ▶ 특히, 서울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GP 철수 및 NLL 무력화 등 전면적 무장해제에 나서 사실상 국가안보의 해체 및 국방 붕괴를 초래

4 향후 전망 및 대응

◆ 우선,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홍보와 그에 대한 보수단체의 반발로 인해 남남갈등이 극심해 질 가능성

- ▶ 정부는 판문점선언보다 상대적으로 호응이 덜한 평양선언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공영방송과 특히 진보단체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릴 전망
 - ※ 지난 9월부터 이미 민화협 등 300여개 친정부 시민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서명운동 및 3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 중
- ▶ 이와 함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등에 대한 소위 마사지된 여론조사를 공표해 평화무드 확산 및 국정 지지율 제고를 위해 활용할 전망
 - ※ 9.20(木)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양회담 후 文대통령 지지율이 53.1%→59.4%, 10월 초엔 60% 중반대로 급반등
- ▶ 그러나 북핵폐기의 로드맵 도출에 실패한 <평양선언>과 무장해제로 평가받는 <군사합의서>에 대한 보수우파의 반대도 만만찮게 전개될 전망이다 바, 극심한 남남갈등에 휩싸일 전망

◆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를 유엔사 해체 및 궁극적 주한미군 철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다분

- ▶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가 종식되었다며,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 상태를 관리해 오던 유엔사의 해체를 공공연히 부각할 가능성
 - 단,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기 때문에, 당장 해체 내지 철수는 없을 것이나 향후 성격 변화 가능성은 불가피
- ▶ 문제는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대비 병력·물자의 거점 역할을 해오던 일본 내 유엔사 7곳 후방기지의 운명도 장담 불가
 - ※ 일본 내 7개 후방기지: 요코타(물자 지원), 요코스카(7함대), 후텐마(해병 3원정군), 사세보·화이트 비치(해병 상륙기지), 가데나(F-22 등 공군기지), 자마(지상군 주둔) 등

II.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 ▶ 향후 북한이 정전협정 4조 60항 ‘외국 군대 철수 협의’ 규정을 들어 美軍기지 사찰을 주장하고, 국내 중북세력과 연계된 시위를 격화시키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사 해제도 시간문제가 될 전망
- ◆ 이와 함께,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해 지속적 동력을 이어갈 목적으로 對美 설득에 적극성을 펼 것으로 보임
 - ▶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9.28)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평양선언 관련 설명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밝혔음
 -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선언 발표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핵사찰에 합의해 흥분된다”고 밝혔고, 이후 폼페이오의 실무 방문 등으로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음
 - ※ 10.7(日)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의제 역시 2차 미북회담의 시기 및 장소 조율이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개최 가능성이 높을 전망
 - ▶ 다만, 美 의회와 조야의 반응 및 평가가 매우 회의적이며,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크게 우려
 - 의회는 김정은의 말장난만으로 제재 해제는 不可하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핑계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무장해제가 한미동맹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 ◆ 이렇게 볼 때, 이번 합의는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주권의 해제이므로,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黨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긴급
 - ▶ 우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 중 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군사안보적 위험성을 따지고 향후 파장 등에 대해 집중 추궁
 - ▶ 다음,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美 전문가들에게 국내 언론에 칼럼 기고를 요청해, 이번 조치가 한미동맹 와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 ▶ 마지막, 이번 합의가 종전선언을 우회한 사실상의 무장해제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걸 국민들이 폭넓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원실과 黨 정책위,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된 국민토론회 등을 다양하게 개최

III.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작성: 장경수 선임연구원 ☎02-6288-0527

文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 일자리 확보 차원의 일자리 정책이 아닌 진정한 복지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정책간의 분절성 오류, 복지 민간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 단절 등의 우려를 지적할 필요가 있음

1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경과

- ◆ 文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요양·보육·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는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34만개 일자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음
 -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
- ◆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을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참여 지자체는 사업범위나 종류를 결정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됨
 - ▶ 시범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아직 매칭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사업 참여 지자체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 ※ 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할 사업 기준은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 4가지 분야임

1)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의안번호 2013464)

2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논란

- ◆ 사회서비스원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
 - ▶ 공공성·책임성 강화의 이유로 찬성하는 측도 있지만 민간기관 통제,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 ▶ 사회서비스 근로자 대다수는 도입에 찬성 입장인 반면, 민간 복지기관·단체 관계자들은 관(官) 주도의 폐해가 더 크고 민간 공급자가 고사할 수 있다고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
-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 역할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에 있음²⁾
 - ▶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을뿐더러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되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 ◆ 사회서비스원은 근본적으로 일자리정책이나 시설관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 ▶ 설립목적에 밝힌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의 대상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정책임
 - ▶ 복지정책 관점에서 본다면 학대와 위기 대응, 자살 및 정신보건, 무한돌봄 등이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사업영역
 -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일자리 확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는 부가적인 목적에 접근하다보니 보육과 요양 일자리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니 3종 복지관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 범주를 넓히려 하고 있음
 -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목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제도의 부가적 효과에 치우쳐 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들만 양산될 뿐임

2)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안)' 1조를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명시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정책간 분절성 오류

- ▶ 커뮤니티케어는 지방분권화 중심, 민간 중심의 맥락을 같이하는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중앙 중심, 공공 중심임
- ▶ 이는 지방분권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 ▶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가 지역 안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개별 매뉴얼대로 접근하다보니 모순이 발생
- ▶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는 같은 맥락 안에서 공통의 가치와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변영해야

- ▶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공급주체, 계약제도, 재정관계에 대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
- ▶ 즉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위수탁제도를 준위탁제도로, 국가보조금과 수가를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체계개선이 이뤄져야 함
- ▶ 이와 같은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만 도입하게 된다면 민간 영역은 심각히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민간 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이 갖는 장점도 사라지게 될 것임



이슈브리프 ISSUE BRIEF (IB 2018-19)

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종인 편집위원 : 김원표·이윤식 간사 : 김영현·김신의

발행처 : 여의도연구원 TEL : 02.6288.0502 Website : www.ydi.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0월 11일 디자인 · 인쇄 : 원기획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